

이슈브리프 828호
(2026. 3.31)

북한 국가정보국 명칭 변경의 함의

제828호

김종원 peter0819@inss.re.kr



국문초록

이 글은 북한이 기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한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다. 202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된 이번 국가정보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북한 정보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외전략 전환을 반영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 정보기관은 1945년 창설 이후 정치보위국·국가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등으로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으며, 올해 다시 국가정보국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개칭의 첫 번째 의미는 체제보위 중심 기관 이미지를 완화하고 정보수집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를 표방하려는 데 있다. 기존 기관 명칭이 최고지도자와 체제보위를 강조했다면, '국가정보국'이라는 명칭은 대외 정보활동 중심 기관으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정보수집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군복 대신 정장 착용 등 상징적 변화와 함께 정보기관으로서의 외형적·기능적 전환을 시사한다. 셋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최근 대남정책 변화와도 연계된다. 명칭 변경은 한국과의 국가 대 국가 구도를 강조하고 대남부서의 기능을 교류·협력에서 공작·정보수집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넷째, 러시아와의 군사·정보 협력 심화 역시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북러 간 정보 교류 확대와 러시아·중국 정보기관 모델과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국으로의 변경은 북한이 체제보위 중심 구조에서 정보수집 역량 강화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군사·경제·사이버 영역의 정보활동 확대를 촉진하여 지역 안보 긴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주제어 : 국가정보국, 체제보위, 정보수집, 적대적 두 국가, 북러밀착

최근 김정은 정권은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했다.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국가보위상이었던 리창대를 국가정보국장으로 소개하며 국가보위성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 공개되었다. 강력한 비민주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최고 비밀경찰·정보·방첩 기관의 개칭은 큰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국의 변화 과정

북한 국가정보국의 명칭은 이번뿐만 아니라 정권을 수립한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45년 11월 19일 김일성이 남포시 보안간부훈련소를 현지지도한 것을 기념하며 국가정보국의 전신이 창립되었다.¹⁾

창립 이후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공식 설치되었다가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내무성 산하 특수정보처, 1949년 6월에는 정치보위국으로 개편되었다. 1951년 3월 내무성과 분리되어 사회안전성이 창설되면서 정치보위국은 사회안전성으로 편입되었고, 1952년 다시 사회안전성이 내무성 사회안전국으로 재흡수되면서 내무성 산하로 변경되었다. 1962년 내무성에서 사회안전성으로 다시 분리되었고, 1972년 북한 헌법 개정으로 내각이 정무원으로 변경되고 사회안전성이 사회안전부로 변경되어 사회안전부 정치보위국으로 바뀌었다.

창립 이후 이 시기까지 국가정보국은 주로 정치보위국의 명칭으로 독립된 기구보다 내각(정무원)의 내무성이나 사회안전성(부) 산하에 편입되어 기능을 수행했다.

1973년에는 사회안전부에서 독립해서 정무원(내각) 산하 국가정치보위부로 승격되었다, 1982년에 정무원(내각)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고, 1993년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변경되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온 이후 2016년

1) 이날이 북한의 사법, 경찰기관의 공통된 창립일이기도 하다.

6월 국가보위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26년 초에 국가정보국으로 다시 바뀐 것이다. 현재 국가정보국은 국무위원회 소속이기는 하나 국방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내각으로부터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²⁾

국가정보국 명칭 변경의 함의

첫째, 이번 국가정보국 명칭 변경의 핵심은 정보수집 강조를 통한 정상 국가화 표방이다. 즉, 국가‘보위’성에서 국가‘정보’국으로의 변경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국의 전신이었던 정치보위국과 국가보위성의 기관명에 ‘보위’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 보위, 특히 최고지도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일성이 정권 수립 이후 유일지배체계를 수립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 받는 과정에서 최고지도부가 받는 위협 의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표방하면서 최고지도자의 보위를 강조하는 국가보위성이란 명칭이 부담스럽게 인식되고 개칭의 필요성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국가정보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보수집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국가보위성은 비밀경찰과 정보기관으로 최고지도자 직속의 초법적 기관의 성격을 갖고 북한 체제의 보위, 사회통제 기능을 담당해왔고, 체제 내 정치사찰과 나아가 물리적 통제까지 가능한 기구였다. 국가정보국은 이처럼 비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체제보위, 사회통제와 더불어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해서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 이번 3월 22~23일에 개최된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회안전성은 내각으로 편입된 것으로도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의도는 명칭 변경만이 아니라 복식에서도 국가정보국장 리창대가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는 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요원들이 무난하고 튀지 않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처럼 북한 국가정보국 요원들이 공식행사에서도 군복을 벗고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최근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의 남북관계 전환도 국가정보국 명칭 변경과 무관치 않다. 정상국가를 표방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관계를 전환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향후 남한과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데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 개편의 하나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국가 대 국가라는 대칭적 구도를 형성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보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필연적으로 조직개편도 수반되는데, 국가정보국 내 대남담당 부서의 역할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폐지하고 대남공작과 정보수집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로 조직개편과 역할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초밀착 관계도 북한 국가정보국으로의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러 군수물자 지원과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정보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가정보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2025년 5월 리창대 국가정보국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보듯이 양국은 정보 당국 간의 교류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기까지 했다.

러시아와의 정보 당국 간 교류 증대는 북한 정보기구의 역할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구(舊)소련 시기 정보수집, 보안, 정치경찰 역할을 수행하던 국가보안위원회(KGB)가 1991년

해체되면서 러시아연방 해외정보국(SVR)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으로 분리되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주로 러시아 국내정보와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해외정보국(SVR)은 해외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공작활동 등을 담당한다. 중국 또한 체제보위를 강조하는 정보기구가 아니라 국무원 산하 경찰부서 중의 하나로 국가안전부를 두고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위만을 강조하는 듯한 국가보위성보다 러시아나 중국 등 전통적 우호 국가의 정보기관과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국가정보국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국가정보국으로 명칭 변경은 향후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체제 보위에 주력했던 이미지를 탈피해서 체제 보위와 방첩 업무 이외에 정보수집 활동까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고, 이는 불가피하게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변국의 사회·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정보수집의 핵심인 사이버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북한의 정보수집이 더욱 강화한다면,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 대응책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